

★

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16876
결재일자	2016.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당	청년지원담당	일자리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이해영	이인복	박태일	전결 04/19 이용식
협조			

도전하는 청년이여, 성북으로 오라!



---

## 성북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자문회의 결과보고

---

2016. 4. 11

성 북 구 청  
[일자리경제과]

# 성북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자문회의 결과보고

‘16년 성북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연구 주제 및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고 드림

## □ 회의 개요

- 회 의 명 : 성북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자문회의
- 일 시 : 2016. 4. 11 (월) 14:00
- 장 소 : 구청 6층 구청장실
- 참석대상자 : 11명
  - 구청(3) : 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청년지원팀장
  - 외부(8)

연번	성 명	사 진	주요 프로필	비 고
1	조 대 엽		·(현)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겸 노동문제연구소 소장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2	김 도 현		·(현)국민대 경영대 교수 ·(前)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3	김 성 희		·(현)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前)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	
4	이 주 호		·(현)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5	임 경 지		·(현)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前)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前)이웃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 이사장	
6	신 윤 정		·(현)서울시 청년허브 기획실장 ·(前)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일자리사업단장	
7	이 종 선		·(현)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 노사관계전문가교육과정 주임교수	
8	김 민 수		·(현)청년 유니온 위원장	

## □ 회의결과(주요의견)

### 우리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 자문

#### ○ 김영배 구청장님

- ▶ 성북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함.
- ▶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청년의 범위를 정의하는 관련 법이 다수이며, 이에 따른 청년문제의 공적체계 책임자가 부재한 상태.
- ▶ 관내 8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지만, 대학과 성북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음. 우리 지역의 청년은 대학생인가, 청년단체 활동가인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들인가 등 누구로 규정해야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지자체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합치가 필요함.
- ▶ 동북4구(성북, 강북, 도봉, 노원) 행정협의회가 현재 구성중이며, 이는 지역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하는 도모하는 우수 상생사례가 될 것임. 협의회는 1) 창조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2) 혁신교육 역사문화 3) 마을사회적경제 민간 거버넌스의 세가지 과제를 가지고 공동의 과제 수행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음. 이번 연구용역도 향후 동북4구 차원에서 확대 발전되는 초석이 되길 바람.

#### ○ 김도현 (국민대 교수)

- ▶ 연구용역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일반적인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큼.  
정책수요분석을 위해 연구 대상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는 과정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으며, 문제해결책이 구 차원에서 해결가능한 것들로 도출되도록 과제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 ▶ 대학이 많은 성북의 특성을 살려 대학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함. 특히 대학 재학 당시 지역과 교류한 경험을 갖는 학생들은 향후 지역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

### ○ 오창민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위원장) - 참관

- ▶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 취·창업과 관련된 경제적 지표가 아닌 대안적인 성과지표가 연구용역에 포함되길 바람.

### ○ 신윤정 (청년허브 기획실장)

- ▶ 우리나라의 청년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중심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이 법상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15세에서 29세인 청년으로 정의하며, 이는 OECD 기준임. 취업을 원하는 자로 규정함은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에 따라 청년정책의 방향이 고용정책에 초점을 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
- ▶ 청년정책은 일자리중심의 고용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얼마전 한겨레에서 발표한 청년 생활안정정책, 청년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정책 등이 대안지표로 바람직하다고 봄.
- ▶ 청년정책을 위한 조사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통계청을 통한 지자체만의 통계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임. 서울시의 자치구 인구는 타시도의 인구와 맞먹는 인구수이지만, 자치구 자료를 얻기가 매우 힘든 상황임.

###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 제도가 가지는 경로의존성이 있기에 현재 청년문제 해결은 실업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로의존성에서 물꼬를 트는 방향을 고민해야 함.
- ▶ 지난 20년 동안 선거때 당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일자리 창출 숫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와 맞먹는 아이러니가 발생.

### ○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 청년문제 중 주거문제는 인구학점 관점인 나이로 구분짓기 어려움.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주거상태가 매우 다르며, 1인가구도 교육상태, 소득상태에 따라 차이가 큼.
- ▶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그 대상에 사회초년생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구직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임. 하지만 구직의사 여부에 상관없는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함. 우수사례가 서대문구 홍은동 사례이며, 일반청년 모두를 공급대상으로 함.

- ▶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들은 자신의 소득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주거비부담율이 높은 상태임. 하지만 옥탑방에 사는 20대 청년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통계가 잡힌 것은 그만큼 표본이 적절하지 못하고 통계의 신뢰성 낮다는 것을 나타냄.
- ▶ 지역사회는 기숙사나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여 임대료를 적절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 ▶ 청년건강권(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질병 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 ▶ 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고용중심의 모델인지, 창업중심의 모델인지, 서울형 모델에 성북버전을 원하는지, 성북형의 독자적인 모델을 원하는지, 대학-지역연계를 초점에 둔 특성있는 모델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조대엽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소장)**

- ▶ 연구용역에 있어 지역자원을 공유하고 소비하는 차원으로서의 청년으로 접근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회의 결과 〉

- ▶ 연구용역에 있어 구 청년정책 지원 대상인 청년에 대한 범위 정의 및 지역사회, 대학과의 연계방안 논의
- ▶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 고용정책에서 탈피한 사회정책으로 인식하고 조사

○ 주요회의 사진

